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외교·안보·대북정책에의 함의

서 보 혁(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Online Series

2023. 10. 13. | CO 23-34

문제의 제기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급진무장세력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에서 전쟁터로 변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개시되었고, 확산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상호 무차별 공격으로 사망자가 10월 12일 저녁 7시 국내언론 보도 기준으로 2,6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서는 양측 간 충돌로 민간인 사상, 민간시설 파괴, 전기 공급 중단 등 인도주의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은 ① 제4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우려, ②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진한 글로벌 복합위기의 악화, ③ 한반도와 발칸반도 등 타 분쟁지역에 미칠 여파, ④ 세계 각국의 경제 및 안보에 미칠 영향 등 그 영향이 실로 막대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비록 사태 초기단계이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한국의 외교·안보·대북정책에 주는 함의를 먼저 생각해봄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일조하고자 한다.

중동사태 외교정책상 함의

외교적 대응은 중동사태에 대한 대응과 그로부터 파생될 한반도 관련 외교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동사태 관련 대응으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10월 11일)를 열었다. 거기서 정부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탄하며 민간인 무차별 살상과 인질 사태를 초래해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언급하였다. 2022년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은 지 60주년이었다. 그해 양국은 각각 중동과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올해 정상회담을 갖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반면, 한국은 팔레스타인과는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구분하고, 국제인도법에 근거해 하마스를 테러 행위집단으로 규탄한 것은 가치와 이익, 양 측면을 충족시킨 판단이다.

한국정부는 테러리즘에 반대하고 국제인도법을 비롯해 인권, 평화, 발전 등 보편규범들의 준수 및 이행을 지지하고 있다. 현 중동사태는 분쟁 쌍방이 국제인도·인권법을 위반하는 무력 충돌을 연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국제규범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동사태에 즈음해서도 국제 규범에 근거해 적절한 외교적 입장을 취해나가는 동시에 경제협력 등 국익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주요 아랍국가들과도 대규모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국익 중심 외교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양측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를 대응하는 것이 ① 이스라엘과 아랍진영의 갈등 완화 및 관계개선에 기여하고, ② 반테러 국제연대를 확대해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③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외교정책상 함의

한편, 이번 중동사태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외교에 주는 함의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와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도 제고, 이 두 접근을 병행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의 기치 아래 반미노선을 견지해온 아랍국가들을 지지해왔고 일부 군사 협력에 나서기도 하였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10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적시하지 않은 채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번 충돌사태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행위의 결과”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였다. 북한은 또 10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중동사태를 미국의 중동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패권적이고 이중기준적인 미국의 중동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태를 유발한 하마스가 북한이 제작한 ‘F-7 고풍 파편 로켓’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RFA, 10월 10일 보도) 국제적 이목을 끌었다. 로켓추진유탄(RPG) 발사기로 분류되는

F-7은 북한이 중동지역에 많이 수출해온 무기이다. 물론 북한은 위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이런 의혹을 “무근거한 자작량설”이라고 일축하였다. 1990년대 말까지 북한은 중동 아랍국가들에 미사일과 그 부품 및 기술을 수출해 한 해 최대 5억 달러의 이익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또 최근까지 북한은 이 지역 아랍국가들에 건설노동자들을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해왔다. 이런 이념적, 실리적 양 측면을 고려해 북한은 반이스라엘, 친아랍 입장을 취해왔는데,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10월 9일,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를 협의하는 비공식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한국은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지의 분쟁 종식과 평화정착을 선도할 책임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세계평화를 해치는 각종 행위를 예방·감시하는 데 국제협력을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외교 협력은 제재와 함께, 무력 사용 및 그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용하다.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정책상 함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주는 일차적 함의는 정보 획득과 안보태세의 일체성이 막중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세계 최고의 정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하마스의 2년여에 걸친 집요하고 기만적인 유화전술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요격률 90%를 자랑한다는 아이언 돔 요격무기체계의 위력은 수천 발의 로켓 공격에 무색해졌다.

한국의 대북 정보 획득 능력에 대한 평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하마스과 종래 북한의 기만전술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한국의 요격체계는 2026년 개발 목표에도 불구하고 요격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개전 초 하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당 1만 6천여 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공동의 대북 정보 공유와 실효성 높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군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의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대북 감시·정찰 자산을 확대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 들어 한-이스라엘은 외교장관회담(6월 7일 서울), 정상회담(9월 20일 뉴욕)을 잇달아 갖고 경제협력은 물론 미사일 방어, 사이버 안보 등 안보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두 분야는 양국이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관심사여서 양국 간 안보 협력은 가속화될 것이다. 또 양국은 지역적 맥락에서 차이가 있지만 비핵화 정책에 있어서도 협력할 바가 작지 않다. 이런 한-이스라엘 안보협력은 양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과 어우러져 두 지역의 긴장완화 및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대북정책상 함의

외교안보정책상 함의의 연장선상에서 현 중동사태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함의는 북한에 강력한 억지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글로벌 규범의 준수가 최선의 생존 방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강력한 도발 억지는 한반도 평화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북한이 중동사태를 이용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커 도발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동 정세를 이용한 도발 가능성에 관해 “एं터리 여론”(조선중앙통신, 10월 13일)이라고 반응하였다. 북한의 국제적 신뢰가 바닥이고, 물리적으로도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나아가 미중 양국이 상호 관계를 관리·조정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일+ 중국의 대북 억지 연합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제재와 지원을 병행하는 접근이다. 하마스나 러시아의 북한 무기 커넥션은 추가 제재의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비확산, 반테러, 인권 보호, 민주주의 등 국제 규범에 기반한 대북 비판과 변화 촉구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중동사태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단념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유용하다. 동시에 대북 인도주의 및 개발 지원에 관여해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병행해나갈 때 대북 억지의 효과는 물론 북한이 국제협력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전망과 과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제4차 중동전쟁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없지 않을 만큼 사태는 심각하고 비극적이다. 분명한 것은 오랜 상호 적대감과 비타협적인 입장,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군사전략으로 쌍방 모두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며 인명 및 생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이

다. 다만,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개선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과 두 개의 전쟁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이 확전을 견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스라엘-하마스 무장 충돌은 역설적으로 외교의 중요성을 웅변해준다. 상대를 존중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이익의 균형점을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한국 경제동향을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모습”으로 평가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중동 사태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넘어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하마스와의 무기 커넥션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현 중동사태가 안보정책에 주는 제일의 함의는 적대세력에 대응함에 있어 억지와 정보의 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이스라엘은 이제 양국 간 협력만이 아니라, 두 지역에서 추구하는 비핵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당사자로서 포괄적인 평화-경제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무장 충돌에서 한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것은 평화, 인권, 발전과 같은 보편가치를 선순환적으로 신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병행 추구하는 접근을 요청한다. 분쟁의 한편에 서기보다는 보편가치를 기준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건설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국가이익과 보편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테러리즘 근절과 중동평화에의 기여, 그리고 한국의 대중동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대이스라엘 관계 강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분리 접근, 아랍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가 합리적 대응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의 제1 기조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 구현’을 천명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은 국가의 이익과 인류의 미래를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민주국가의 위상과 책임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